

대선주자에게 바란다

과학기술계는
차기 대권주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각계 의견을 알아보았다.

◆ 게재순서는 원고접수순임.

「科技특별법」정신 살려 기초과학진흥 힘써야



崔德隣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1세기의 한국을 열어 나아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을 분이다.

새 대통령은 21세기의 세종대왕이 되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꽃피울 적극적 의지를 가진 분이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한 예로는 천신만고 끝에 태어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정신이 십이분 발휘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진흥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위해 기술투자재원 늘려야



裴洵勳
(대우전자(주)회장)

한국기업은 제조 중심에서 지식 중심의 운영으로 재개편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한국내 임금구조 때문에 지식집약형태로 운영하지 않으면 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기업이 기술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둘째, 내부개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셋째, 기업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할 환경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자유경쟁 시장 질서의 확립(규제개혁을 통한) 등이 국민합의 하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은 구호로 그쳐서는 안된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우선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남북 과학기술협력 동질성회복에 관심을



鄭助英
(파총 상임부회장)

오는 21세기는 과학기술시대다. 특히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세계는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이 한 나라의 ①경제 성장 ②국가안전 보장 ③국민건강 증진 ④환경 개선 ⑤삶의 질을 향상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과학기술투자는 물론

‘과학기술혁신’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특히 우리는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남북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1992년 9월 19일 공인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제16조」에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교육 ...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대선주자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며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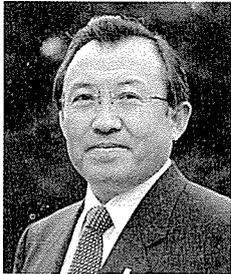
1. 상호이익이 되는 공통 관심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과학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초기의 혼란과 비능률을 없애기 위하여 민간기구를 통한 ‘창구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3.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의 ‘상호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우선 ①학술지 교환 ②학술회의 개최 ③기자재 지원 ④기술 지원 ⑤공동프로젝트 참여 ⑥공동연구단지 건립 등을 추진하여 '북한의 연구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5.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을 조속히 확보하

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과학기술통합'을 이룩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 科技국정비중 높이고 출연기관 지원확대를



朴元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과학기술이 경제, 문화,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가 21세기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서는 과학기술이 뒤쳐지는 것을 바로잡기 바란다. 21세기 국가의 기틀이 되는 과학기술에 꾸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올려지던 출연연구소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육성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은 도마 위에 올려질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원의 무대 위에 올려져서 국가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물고를 터 주어야만 한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선진국의 대기업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과학기술 총량은 계속 확대되어야만 한다.

21세기를 대비하여 국내외에서 교육되는 고급 두뇌도 국내에는 답을 그릇이 없어 고급 인력의 실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때 이들을 일정기간 수용하는 훈련기관으로서도 출연연구소는 확대 지원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기대에 못미치면 없애야 한다는 양비론적 대처보다는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한 애정은 없더라도 미래를 향한 비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과학기술 총량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출연연구소를 집현전으로 운영하는 세종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 科技중장기계획 따를 정책일관성 유지해야



林寬
(삼성종합기술원장)

2차대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경쟁력은 정치력과 군사력이 좌우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력의 비중이 급격히 그 자리를 대체하였으며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둔 지금은 기술력이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현재 경제, 군사분야의 강대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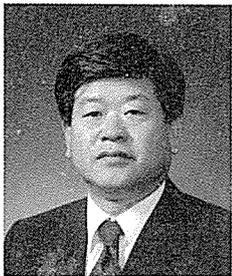
될 수 있었던 원천도 바로 높은 기술수준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의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2%, 7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로 크게 못미치고 있다. 과학기술입국을 위해 대선후보들께 바라고 싶은 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이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해 많이 알면 더욱 좋겠지만 설령 잘 모르더라도 과학기술처 장관 등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자주 바꾸면 안될 것이다. 이는 마치 감독이 자주 바뀌어 특성없고 실력없는 축구팀을 낳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장관이든 관료든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둘째,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어 왔지만 무지개빛 청사진으로 그치고만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제는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과감하게 이를 추진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과학기술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이 곧 경제력이고 군사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국가경쟁력 제고위해 정보표준화 시급하다



李 載 昌
(고려대이과대교수)

와 관련된 하드웨어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와 투자의 필요성은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고속정보망을 통해 전달될 '정보' 그 자체에는 소홀한 것 같다. 여기서 정보가 고부가가치의 형태로 유용성을 가지려면 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화는 과학, 산업 발달, 상행위의 공정성과 관련된 물리적 국가표준제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보 및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유통에도 선제적 요건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의 표준화사업을 즉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막을 연 정보화시대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이

| 과학기술에 애정갖고 첨단기술확보 힘써야



吳 世 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우리나라는 산업과 경제규모에 비해 과학기술자의 수가 매우 적다고 한다.

우리의 좋은 과학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들이 끊임없는 탐구와 창조로 국가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보다 많은 우리의 2세들이 모두 과학기술자 되기를 선망하여 공부하고, 또 국민 모두가 과학을 생활화하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재임기간 중에는 국민들로부터 눈에 띄는 사랑을 받지 못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들을 사랑해 주기 바란다. 뛰어난 예견과 확고한 의지, 굳건한 믿음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

또한 과학자들이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에 깊이 참여하여 우리 고유의 첨단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한다. 과학자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과학은 분야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과학자들간의 경쟁은 욕심을 조장하여 창의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협심하여 과학한국 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21C 선진국 진입위한 과학기술비전 제시를



李 鎭 玉
(포항공대교수)

미국의 South Washington주에 있는 Mount Rushmore National Memorial을 방문한 적이 있다. 미국의 워싱턴, 제퍼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대통령의 웅장한 초상이 화강암 산에 조각되어 있다.

그 초상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우리 한국에도 저분들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을 가졌다면 또 앞으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들의 대통령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탁월한 지도력과 비전으로 나라를 이끌어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한국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진정한 지도력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불행과 파란으로 점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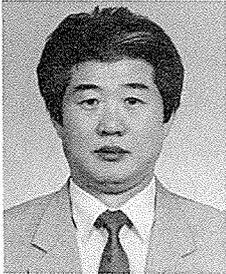
21세기에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도약이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경제부흥은 건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개발한 과학과 기술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장기적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자체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공헌을 할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환경정책, 경제원리로 피해계층 최대보상을



都 甲 守
(숭실대공대교수/한국폐기물학회장)

지난 해에 '21세기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환경선언을 공포한 바 있으며 금년 제25주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서울 회의에서 '서울환경선언'을 채택한 바도 있다.

그러나 지구 환경보존에 대한 기여는 체처두고라도 국내 환경문제에 있어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5년동안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은 되었으나 환경부장관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환경정책이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기술이 잘 개발 보급될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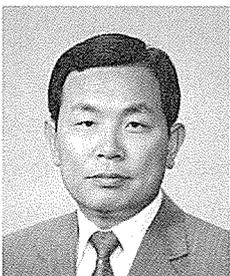
환경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소모적 경비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크므로 제도·기술·시민참여가 3박자로 조화를 이루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기술개발의 성과물은 재활용도 어려운 폐기물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오염방지나 처리가 아니라 경제원리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 21세기의 경제는 환경영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대선주자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구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실천에 의하여만 풀어나갈 수 있으며 크고 작건 간에 기술과 설비를 통하여만 수행된다.

이와 같은 시설은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기피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NIMBY)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피해보는 계층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더보는 계층의 이익을 적절하게 전달 안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이들 시설이 제한개발구역(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욱 지역주민들을 감싸주어야 할 것이다.

|國運, 바다경영에 달려...해양경쟁력 확보 시급



朴 炳 權
(한국해양연구소장)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해양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기술경쟁,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과의 해양영토 줄다리기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포성없는 해양전쟁의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필수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차기 대통령은 바다경

영을 통해 우리의 국운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해양비전을 갖춘 지도자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해양의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대기 등 각 기초과학분야와 공학적 기술의 응용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종합시스템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 소규모 연구비나 단기적, 단편적 연구수행으로는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선진국권 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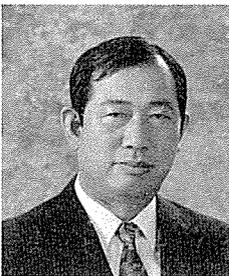
첫째, 연구개발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에 부존하는 막대한 양의 생물 및 광물자원, 광대한 공간, 조력, 파력 등의 무한한 해양에너지, 그리고 태평양 심해저의 망간단괴와 같은 전략 금속광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꼭 필요한 자원들이다.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확보가 선결되어야

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만 한다. 또한 해양연구는 그 특성상 기초과학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단기 연구성과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연구결과의 산업화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또는 확보해서 임계규모에 달할 수 있도록 해야만 양질의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훈련된 우수 인재의 유치 및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 수립,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변동성 규명 등 자연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규모의 해양관측 조사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자료 획득과 해양자료가 현업에 즉시 이용될 수 있는 실시간 서비스기능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식량무기화시대 대비 농정개혁 지속추진을



朴相一

(충북대농대교수/한국약용작물학회장)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인류의 문화, 의식 및 경제활동 등이 지구촌화되고 있는 추세다.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되었다. 세계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의 무기화시대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한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과 직

결되는 기본식량 확보와 기초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정책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TV토론 등에서 나타난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보면 농업분야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농업은 우리의 식량해결과 국토보전,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도에 수립된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즉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15조원의 차질없는 집행을 요구한다. 또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수출가능품목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둔 장단기 농업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 바라건대 식량무기화시대를 맞아 늘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 신해양시대 적응위해 수산업구조 개선해야



陳平
 <부경대해양과학대교수/한국수산학회장>

해양법의 발효,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의 정책, 국제 환경관련조약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해양 및 수산질서, 무역질서, 환경질서 속에서 조업규제, 수입개방 압력, 내적인 어업경비의 압박, 노동력 조달의 어려움 등등 우리의 수산업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수역에 있어서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확정문제가 최근 중·일의 처사로 보아 지난한 당면사항이고 공해상과 연안국 2백해리 내에서의 어업자원관리는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어서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수산업의 급선무는 인력자원, 어업자원, 어선, 어항, 어촌, 수산기술, 수산행정 등에서 전근대적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개선의 공통분모는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 연안 및 연근해 어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자원조사, 자원의 보존과 관리, 환경조사, 자원의 육성 등 어느 분야에도 체계적이고 지속된 연구분위기가 없었기에 오늘 우리는 적조문제만 하더라도 속수무책이 아닌가 한다.

| 전문학위제도 도입해 산업전문인력 확보를



金振淳
 <충남대공대교수/대한공업교육학회장>

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기능인력과 양질의 고등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능·기술인력의 양성제도를 개선한다. 1)기능·기술인

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이원화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학문 중심의 학위제도와 기술 중심의 전문학위제도를 활성화한다. 2)산업현장의 기능·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국가주도의 공급자 위주에서 민간주도의 수요자 위주로 바꾼다. 3) 군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산업현장의 기능·기술인력으로 활용한다. 4) 이공계 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이공계 대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한다. 5) 교육부에 직업교육국을 설치하고 공업교육과를 두어 공업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공업교육의 국가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다. 6) 공업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및 졸업생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한다. (예 : 공고의 동일계 진학 특혜, 공고졸업생의 산업현장 취업시 병역

연기, 공고·전문대·공과대학 실험실습시설의 확충, 공고교사 실기수당 인상 등)

| 의료보험정책 개선과 의료체계 일원화해야



河 權 益
(삼성서울병원장)

무엇보다도 대선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선 의료복지분야의 중요성을 2000년대에 걸맞게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심도있게 인식해 주기 바란다. 노인인구의 증가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두가지만을 건의코자 한다. 첫째, 의료보험정책 개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출발한지 20년동안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하

다보니 많은 부분 특히 진료의 왜곡현상을 나타내어 불구의 의료보험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으로서 빈민형의 의료보험체도가 아닌 선진국형의 체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도, 적정한 진료도 어려워 해외로의 진료이탈현상을 막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보험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동서의학 협력을 통한 의료일원화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 세계에서 의학의 이원화현상이 우리나라만큼 뚜렷한 곳이 없다. 국민보건의 장기적 안목으로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는 이미 연구기관과 관련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 바도 있다. 어쨌든 오늘날 양·한방 의료의 접목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동서의학 협력에 장애가 되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부처별 중복투자 막게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李 政 旭
(문화일보 과학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송국과 주요 일간지들이 공동으로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소위 '대선주자 시민대토론회' 라는 것을 여러 차례 벌인 바 있다. 각양각색의 질문과 답변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진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대선주자와 언론계 인사들의 과학마인드가 이 정도이

니 일반국민들의 과학마인드는 과연 어떻게겠는가.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혹은 “21세기는 과학 기술시대다”라는 상투적인 말은 필요없다. 현재 과학기술계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주자에게 바라는 몇가지 사항만 간추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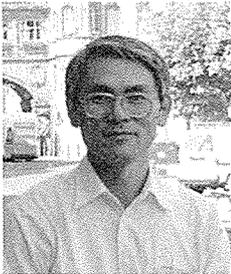
첫째, 과학기술처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부처별 연구와 기술개발기능이 분산돼 있다. 이들 부처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게 하는 종합 조절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야한다.

둘째, 문민정부 출범이후 과기처장관이 무려 5번이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 수가 있었겠는가. 바람잘 날없는 정치논리에 과학기술까지 덩달아 춤을 추게하지 않을 의지나 묘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차기 지도자는 올해 어렵게 마련한 5년간의 한시법인 과학기술특별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 법의 핵심인 과학기술예산의 확대, 과학기술대중화 그리고 과학기술자 우대를 위한 실천적 정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최고 통수권자로 선택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

|항공산업은 국력지표, 21C대비 정책세워야



金龍協
(서울대공대교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 남은 시간이 대선주자 여러분의 비전과 경륜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21세기를 힘차게 열어제칠 수 있는 지도자를 현명히 선택하게 되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한 바람과 더불어 과학기술, 특히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대선주자들에게 간절한 기대를 갖게 된다.

항공우주산업이 21세기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국력의 지표가 되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했고, 이제 우주공간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간 주력

산업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20위권이라고 하는 낙후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여러 번 되풀이 되어 왔던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구호가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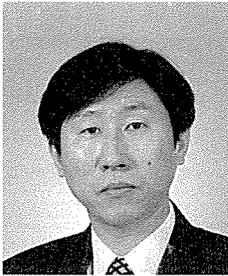
항공우주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장기적인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필요하다. 비록 몇 번의 실기로 늦어지기는 했으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21세기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헌신할 각오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들어 시작된 각종 항공우주 관련 사업들이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비록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의 영광과 책무를 누리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선거 이후에도 국가를 이끌어 나갈 분들이라는

점에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남은 기간 동안의 선전을 기원한다.

| 科技패러다임 끌어갈 창의적인 인재키워야



林 基 哲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기획조정실장)

21세기는 지식기반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학습지향형 사회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결국, 기술혁신을 국가발전의 핵심축으로 삼는 국가경영의 기본틀은 필연적이다. 기술혁신의 3요소는 사람, 시스템, 제도로 이

들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면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식기반의 경제를 맞아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인 듯하다. 지금까지는 선진국 모방전략에 의지해서 경제를 키워왔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창의성 발휘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몸을 신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양적 투자확대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고 이들을 과학기술계에서 활동하도록 장을 만들어 주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최고 통치자보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최고 통치자를 원한다.

| GNP7% 科技투자, 재미과협 지원·활용을



崔 仁 甲
(재미과협 부회장)

21세기에 한국이 국제경제무대에서 경쟁하여 승리

하려면 GNP의 7%를 각각 과학기술에 투자하기 바란다.

재미과협(KSEA)에는 일년에 약 백만달러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KSEA를 최대한도 활용하면 한국 과학기술계가 세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워싱턴에 있는 과학회관 같은 회관을 바텔연구소가 있는 콜럼버스, 오하이오나 시카고, 보스턴, 뉴저지, 캘리포니아, 덴버, 콜로라도 같은 지역에도 세우면 한국 과학기술계의 세계화 추진에 더욱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①